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7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수립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7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10월 26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김설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87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 개정·시행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울산광역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3

건축·도시 분야 계획수립 동향

국토부,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기재부,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마련
행안부, 6개 기관 세종청사 이전규모 산정, 재배치 계획 확정
행복청, 대학·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한 신개념 대학(캠퍼스) 구현
서울특별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인천광역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추진
전라북도, 지자체 최초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 2025년까지 경남도 전체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첫 수립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23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사업 지자체 42곳 선정
국토부,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발표
국토부,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국토부,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 선정
행안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인천광역시·통영시 선정
문체부,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해수부, 2023년 어촌유희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발표
고용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총 410건 선정
행복청, 도시상징광장 2단계 2022년 9월까지 설계 마무리, 연내 착공 예정
산림청, 광양시 포스코 협업으로 포스코 도이정원숲 조성 추진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 ‘26년까지 본격 공급
서울특별시, ‘강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서울특별시, 새 시립도서관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부산광역시,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2024년 개장 목표로 본격 조성 착수
경기도, 소멸 위기 어촌 위한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전라북도, ‘2023년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지원사업’ 공모 추진
전라남도, 전국 유일 ‘행복등지사업’ 호응

경상북도, 전국 최초 임대형수직농장 및 노지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경상북도,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 공모사업에 올진 구산항, 영덕 오보항 선정

46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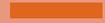
행안부, 「공유누리」에서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 본격 추진

서울특별시, 혼잡도·도로상황·주요 명소 50곳 '실시간 도시데이터' 한눈에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9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균형발전과. 2022.09.06.



정부는 9월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조정(안)」

구분	주요 내용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 -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세종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유지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추가로 모니터링 - 인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우선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②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③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9.26.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 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27일(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률 위임사항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법률 위임사항 규정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 가능 -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단,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음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 제한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 기존 기능(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지원 등)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함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22.09.16.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부터 9월 19일 까지 입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 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납부유예	- 납부유예 신청절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납부대상 금액)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 개정·시행

입지총괄과. 2022.09.29.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9월 30일(금)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구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시 논의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현행	-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운영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
개선	-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이고 연면적(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 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역균형발전과. 2022.09.06.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 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가능 하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 -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사·도에, 사·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 *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사·도에, 사·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수요 반영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 지정 * 다만,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등기 등 필요
생활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함 * 세부 요건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외국인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함

행안부,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역균형발전과. 2022.09.0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써,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기부자가 받는 세액 및 답례품 한도(예시)
 - 10만원 기부시, 130,000원 혜택(세액공제 100천원, 답례품 30천원)
 - 20만원 기부시, 176,500원 혜택(세액공제 116.5천원, 답례품 60천원)
 -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혜택(세액공제 248.5천원, 답례품 300천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모집·운용 등 비용 충당)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200억원 12%,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행안부,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자치분권제도과. 2022.09.13.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수)부터 10월 2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
지방시대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 중앙은 상향식 운영 방식 채택
주요 시책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
지방시대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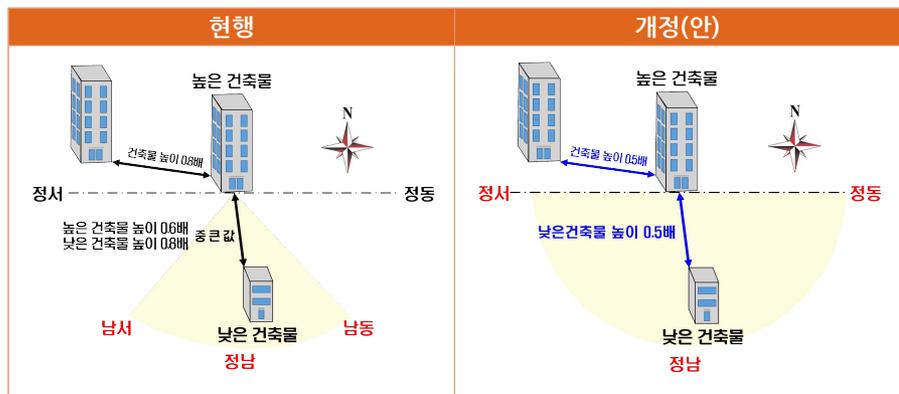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
 건축기획과. 2022.09.06.

- 건축 정책
- 주택 정책
- 도시 정책
- 환경
- 안전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며,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도시계획과. 2022.09.23.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주택
정책

울산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66년 울산시청 주변으로 지정된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농촌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농어업자재 제조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 그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었던 사항들을 일부 개정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기존 병원의 용적률의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증축이 가능하다.

이밖에 준주거지역 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역세권,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서 기존 500%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를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하도록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촉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오는 10월 13일 개정·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

도시계획재생과. 2022.09.26.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개인오수처리 시설허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 2층이하 150㎡미만으로 제한 * 예외: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용시설,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 강화
도민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100%)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 시설된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 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 신청 시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용적제 적용 제외 대상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추가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1.5톤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차고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경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유희토지 개발과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이전지역시설의 범위와 대상 면적을 5천㎡(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으로 경함 - 준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500%)의 140% 이내 완화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대규모(30만㎡이상)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정담당관. 2022.09.30.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 15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으로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신3고(高)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
재산세 세율 인상 (고급선박)	1%	3%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득세·재산세감면 축소	50%	25%
재산세 세율 유지	일반선박 0.25%, 장기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	저율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연장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27%	2024년까지 2년 연장

-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신고시 재산세 50% 경감 1년 연장
- ※ 착한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현행)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2023년까지 1년 연장
-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 (산업용건축물)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 추가 감면
- ※ 기타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까지 과세유예 2년 연장

건축·도시분야 계획수립 동향



국토부,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 세종시에 들어선다

주택건설공급과. 2022.09.19.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 (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주택단지 조감도]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주택정비과. 2022.09.29.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27(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부과기준 현실화	- 부과율 결정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을 기존 2천만원→7천만원 단위로 확대							
	초과 이익	현행	0.3억 이하	0.3~ 0.5억	0.5~ 0.7억	0.7~ 0.9억	0.9~ 1.1억	1.1억 초과
		개선	1억 이하	1.0~ 1.7억	1.7~ 2.4억	2.4~ 3.1억	3.1~ 3.8억	3.8억 초과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부과 개시시점 조정	-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 예정							
실수요자 배려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을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 -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							
	보유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감면율	50%	40%	30%	20%	10%	* 준공시점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은 1주택자 기간만 인정		

기재부,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마련

조세법령운용과. 2022.09.28.



정부는 지난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그 후속조치로서 국세분야에서 아래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세분야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계약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p> <p style="text-align: center;">임차인</p> <p>① 임대차 계약 (임주개시일 이전) ② 미납국세 열람 (동의 없이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③ 임차인의 열람 후 열람통보 →</p> <p style="text-align: center;">임대인 전국 세무서</p>	
(임차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 원칙 명확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 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 3자에 저장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장권에 우선하는 조세채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채납액이 저장권에 우선할 수 없음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다 앞서는 납·국세가 존재시, 종전 임대인의 국세채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p> <p style="text-align: center;">배분 총액 → (변제 순서)</p> <p>중 전 임대인 미납 국세 주택임차보증금</p> <p>변경된 임대인 미납 국세 주택임차보증금 미납 국세</p>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 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p> <p style="text-align: center;">배분 총액 → (변제 순서)</p> <p>현행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저당권 주택임차보증금</p> <p>개선 주택임차보증금 저당권 주택임차보증금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p>	

행안부, 6개 기관 세종청사 이전규모 산정, 재배치 계획 확정

청사기획과. 2022.09.07.

건축
정책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10월 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 입주 기관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하여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접한 저층부(1층~4층)에 배치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동에는 보안성과 효율적인 정책홍보 등 취재편의를 고려한 공용브리핑실이 위치하고 있어, 행안부는 3층, 기재부는 4층에 출입기자실과 대변인실 사무실 연접배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기재부와 행안부가 중앙동에 입주한 후에는 과기정통부와 인사처가 외부 임차청사에서 세종청사로 내년 5월 입주한다.

이번 재배치 계획에 함께 포함된 기관 중 소방청은 외부 임차 중인 일부 조직을 포함하여 17동에 조정 배치하고, 조세심판원은 부족 면적을 추가하여 4동으로(현재 2동) 내년 5월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행복청, 대학·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한 신개념 대학(캠퍼스) 구현

도시성장촉진과. 2022.09.14.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4일(수),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다수의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대학’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대학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대학·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기관 간 발전, 나아가 도시 및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공동대학(캠퍼스)은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되며,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임대형대학(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대학(캠퍼스)’로 구성된다.

공동대학(캠퍼스)의 부지 조성과 임대형대학(캠퍼스) 공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2024년 임대형 대학(캠퍼스) 개교를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하 1층, 지상 5층, 8개동 / 연면적 58천㎡, 대지면적 149천㎡(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연면적 11천㎡, 507실 규모로 건립 추진 중)

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계열은 2020년 모집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행정, 정책 등)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공동대학 조성사업은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한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중요 과제이다.

지난 2022년 7월 임대형대학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대학의 안정적인 개교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주체인 공익법인 설립·운영 예산 확보 및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도심재창조과. 2022.09.0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서울특별시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②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③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부 외 지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별된 11곳을 정비 가능구역으로 지정 -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을 인센티브 부여, 구역별 부담률을 현행 여건에 맞게 재정비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 도입 -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음 -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 추가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 도입 계획 -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

인천광역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추진

재생정책과. 2022.09.29.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개편내용은 ①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 도시경쟁력 강화, ③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의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실정 및 여건 등에 부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수립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원도심 지역 921.74km²를 대상으로 관련 용역에 착수해 도시재생 신규 제도 대상지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이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해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중심·골목상권과 원도심 재생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해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거점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지자체 최초 '에너지복지 기본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과. 2022.09.29.



전라북도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21. 06 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보다 따뜻한 전북 에너지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 방향과 17개 과제를 발굴했다.

[보다 따뜻한 전라북도 에너지복지 실현' 3대 추진방향 주요 내용]

추진방향	주요 내용
에너지복지 정책기반 강화	- 관련 조례의 개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확충 등이 포함 - 에너지 미공급 지역으로 국한된 관련 조례명을 에너지복지로 개정해 보다 포괄적 정책을 추진
에너지 공급 및 전환 가속	- 농어촌 중심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농어촌형 수소시범 도시 조성 등 포함 - 2026년까지 전기 100% 및 도시가스 (준도시가스) 8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
에너지 효율 및 안전 향상	- 취약계층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가스 및 전기안전장치 보급사업,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발굴 -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관리의 디지털화 선도 구상

전라북도는 발굴된 과제 중 신규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예산편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2025년까지 경상남도 전체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도시계획과. 2022.09.2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2025년까지 시·군별 전략사업 종합계획과 도시·농어촌공간 도시계획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45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민선 8기 도정 중점과제인 도시정책 총괄·기획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차별화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공간구조 개선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변화에 대응한 도시 경쟁력 및 생활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구·주택,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특성을 포함한 ▲시·군별 정책·전략계획 ▲공간구조 구상 ▲기능 분담계획 ▲개발과 보존지역을 구분하는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녹지·경관 등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다.

또한, 도시·농어촌형 도시계획 발전 신모델 개발을 통해 시·군별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을 실행하여 경상남도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완성도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성 있는 공기관 협업 ▲도시정책 총괄 기획·조정을 위한 상임기획단·도·시·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전문가 자문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질적 성장 유도과 지역별 경쟁력 있는 전략계획을 개발은 물론, 그간 집행 기능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총괄 기획기능으로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첫 수립

도시계획재생과. 2022.09.30.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 변화와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목표 및 1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계획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를 지정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11)에 대해 행정시 검토구역을 반영했다.

재개발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35개소)을 수립했고, 향후 주민 자율로 신청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전체를 반영했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사업 지자체 42곳 선정

디지털도로팀. 2022.09.01.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42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09년부터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3년 신규사업을 통해 도시부 소통관리, 신호운영 고도화, 돌발상황 관리 개선 등 지역 교통문제 개선을 추진하며, 작년에 이미 선정되어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18개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비를 지속 지원한다.

* 신규 42개 선정: 경기 15, 강원 5, 충남2, 경북4, 경남전북3, 그 외 1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사업의 주요 사례]

지자체	사업	주요 사례
부산	해상교량 실시간 교통관리체계 구축	- 광안대교~신호대교(을속도)간 약 30km 구간에 실시간 교통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구간별 교통량 및 속도, 돌발상황 관리 등 추진 예정
강릉	'26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	- 실시간 디지털트윈기반 도로교통 관제 고도화를 추진하여 특히 관광통행이 많은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ITS 세계총회 유치지원을 위해 행사장(올림픽파크)과 숙박시설(강문해변)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구간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ITS 기반 인프라 확대도 지원 계획
서울, 청주 등	교통신호개방시스템 구축 및 민관협업 고도화	- 서울시는 4차로 이상 총 370km 구간에 대한 교통신호정보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향상, 대기오염 감소 등 도모 - 청주시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주)카카오모빌리티와 공동으로 ITS 데이터기반 교통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요 교차로 100개소의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운전자 네비게이션(앱)을 통해 제공 계획
전주	지능형하천시스템을 교통정보센터에 연계하여 차량침수 예방	- 지능형 하천수위 감지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를 연계하여 하천범람으로 교량·우렁교, 이통고 등 언더패스와 남부시장 둔치 주차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경우 인접 지역의 진입로에 통제정보를 도로전광판(VMS) 등을 통해 사전 제공

국토부,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발표

도심재창조과. 2022.09.15.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2.5~22.9)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99년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온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별부분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하여 이중 우수한 2곳을 선정하였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관악, 부산 사상 등), 그리고 특별부분 2곳(서울특별시, 서울 강동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2022년 건축행정 평가 개요>

- (대상)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17, 기초226)
- (근거) 건축법 제78조제4항
- (지표)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건축안전관리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노력 ⑤가감점
- (방법) 일반부문 정량평가는 자체평가*하고, 일반부문 정성 및 특별부분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내부1, 외부5)를 통해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제출

국토부,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도심재생과. 2022.09.18.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지의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20년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총 44곳을 선정(20년도 16곳, '21년도 15곳, '22년도 13곳) 하였으며, 저비용-고효율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민,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스마트기술 선정 등의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중인 서버와 연계하거나 민간참여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분야별 주요 예시]

구분	주요예시
안전·소방 : 스마트 재난 예·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 상승시 하천 입구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 - 수집된 수위 데이터를 활용, 재난 발생 사전 예측으로 재난 예·경보 방송을 송출, 저지대 거주 주민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신속한 대피 가능
교통 : 스마트 안심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통 시설물에 지능형 CCTV, 속도위반 경보장치 등을 구축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 유도 - 음성 안내장치,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비상벨 등 방범 장치 결합으로 범죄예방 효과
에너지·환경 : 스마트 클린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는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도로 살수장치가 작동되어 열섬현상 완화 - 살수차에 비해 살수 주기단축
생활·복지 : 스마트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로 인근에 미세먼지 에어돔, 디지털타이거, 공공와이파이, 온열벤치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쉼터를 조성, 지역 주민들이 모여 야외활동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

국토부,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 선정

도시경제과. 2022.09.29.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9곳의 도시와 4개의 서비스가 인증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곳의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 등 5곳이 선정되었다.

스마트 도시인증 심사는 지자체의 ①스마트 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②관련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③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 방재·환경·방법 등 다양한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스마트 서비스인증은 ①체감효과 및 시민 만족도, ②기술·기능의 수준 및 적합성, ③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64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도시인증과 마찬가지로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를 받은 서비스에 인증이 부여되었다. 인증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부문 조달 절차상 혜택이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행안부,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지원과. 2022.09.0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8.8~1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구분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 대상
16개 지자체 (여주시는 중복)	10개 지자체	7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2개 지자체)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청양군	- 서울 동작구·서초구 - 경기 여주시(시 전체) - 강원 홍천군
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동)	-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광역시·통영시 선정

관광정책과. 2022.09.0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첫 번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국제명소형'에 인천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경남 통영시를 선정했다. 올해 각각 국비 7억 원과 3억 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서 최대 4년간 '밤이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월미도·개항장)'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인천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관광객 110만 명 유치, 소비지출액 770억 원 유발과 일자리 3,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성장지원형'에 선정된 경남 통영시는 '밤 아홉 시, 통영 오광(五光)'을 주제로 과거 삼도수군통제영의 밤 문화(12공방)와 전통문화예술자원(통영 오광대, 옷칠 등)을 바탕으로 통영만의 야간관광을 계획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구상도(안)]

문체부,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지역문화정책과. 2022.09.28.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진주시, ▲충주시,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18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에 대한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제4차 문화도시를 6곳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지난 문화도시 평가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사업과 지역발전 성과 창출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2.0 계획’에 맞추어 '23년에 제5차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지자체 및 사업명]

지자체	사업명
경북 경주시	「황금도시의 비상(飛上)」 천년을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경주
전남 광양시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문화교역도시 광양”
서울 성동구	스마트 문화도시
강원 속초시	공존문화도시 속초, 시민의 문화적 삶이 생동한다
부산 수영구	골목에서 바다로! 누구에게나 문화도시 수영
경남 진주시	조화와 균형 있는 적정 문화도시 진주
충북 충주시	「충주(州)살면 충주(主)사람」 시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충주
충남 홍성군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인(人) 문화도시, 홍성

해수부, 2023년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발표

어촌어항재생과. 2022.09.30.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 제주 제주시 애월읍, 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화성시 제부리’는 노후화된 2층 규모의 어촌 체험 휴양마을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간편식 판매장, 해안가 카페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객용 해산물 간편식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가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노후화된 식당 겸 체험장 건물을 주민·관광객 쉼터 및 숙박시설, 업무와 휴양이 동시 가능한 공간(위케이션 사무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건물의 경우 애월 해안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원격근무 수요에 맞춘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업무 겸 휴양을 위해 머무르는 장기 투숙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 대천리’는 노후화된 마을 내 창고시설을 해산물 레스토랑 및 수산물 판매장, 지역 역사·문화 전시관, 지역에 전해지는 요리법 전수를 위한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천사대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해산물 레스토랑을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고, 낙지·새우·민어 등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용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직업건강증진팀. 2022.09.18.

건축
정책

안전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처리절차) 개선계획서 제출안내 → 개선계획서 제출(사업주) → 시정지시 → 시정결과 제출(사업주) → 시정결과 확인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총 410건 선정

활용정책과. 2022.09.15.



문화재청은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165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10건, 「문화재 야행사업」 47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43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45건 등 총 410건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포함한 관람객들에게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생생문화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강원도 정선군, 평창군, 영월권) - 서대문형무소, 독립의 그날로 시간여행(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수산성 장대에 오른 평화감성산행(경기도 김포시) - 들에 산에 올리는 흥겨운 망상농악(강원도 동해시) -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전라북도 익산시) 등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양 in the city(광주광역시 광산구) - 내일로 가는 결성향교(충청남도 홍성군) - 충주향교에서 즐기는 꼬마선비의 선비풍류(충청북도 충주시) - 어린이 선비학교, 의산서원(경상북도 영주시) - 문행충신(文行忠信) 진주향교(경상남도 진주시) 등
문화재 야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림지 달빛 문화재 야행(충청북도 제천시) - 기억의 향연 송파야행(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명, 들으명, 마음의 새기다-선덕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스토리여행-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전라남도 나주시) - 도전, 북한산 승병 체험(경기도 고양시) - 무릉계곡 병풍삼아 삼화사 있더라(경기도 동해시) 등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범연의를 낳은 갈암중가(경상북도 영덕군) - 공각지 속의 공, 혼불을 지피다(전라북도 임실군) - 흥범식 고가에서 열리는 신나는 이야기 여행(충청북도 괴산군)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대암각화의 완전한 원형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콘텐츠(생생문화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황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공존과 공생(생생문화재, 충청남도 예산군) - 메타버스와 함께 체험하는 칠불암 힐링 체험(전통산사, 경상북도 경주시) 등

행복청, 도시상징광장 2단계 2022년 9월까지 설계 마무리, 연내 착공 예정

도시공간건축과. 2022.09.19.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환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표상징 시설인 도시상징광장 2단계 구간의 설계를 2022년 9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상징광장 1단계는 나성동 중심상업지구에 ‘국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중앙부를 비우고 바닥분수, 잔디광장 및 거울분수 등 다양한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2021년 5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디어큐브’를 통해 공공콘텐츠를 시범 방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할 예정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도시상징광장 2단계는 2생활권 중심상업지역과 S생활권의 중앙녹지공간을 연결하는 광장으로, 시설 도입을 최소화하여 걷고 싶은 가로환경과 축제, 교류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성2교 상부에 위치한 교량구간은 보행자의 소소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화쉼터구간은 이용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초화원을 제공, 광장구간은 각종 행사는 물론 시민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림청, 광양시 포스코 협업으로 포스코 도이정원숲 조성 추진

산림정책과. 2022.09.02.



산림청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지원하고자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저감사업(이하 REDD+),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탄소저감 활동에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22년 9월 2일, 광양시에서는 산림청, 광양시, 포스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포스코 도이정원 숲 착공식”이 개최된다. 최근 기업이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투자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기업환경에 맞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포스코에 도시숲 조성 및 탄소시장 연계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플로우와 관련 물류회사들이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광양시에서는 유희부지 제공 및 사후 유지관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여 탄소상쇄 도시숲 조성이 추진되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성된 건강한 산림은 도심의 부작용 없는 탄소흡수원이 되고, 공동체의 쉼터로 활용되며, 산림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포스코 도이정원숲 조성계획 조감도]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한 '상생주택' `26년까지 본격 공급

전략주택공급과. 2022.09.08.



서울특별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울특별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상생주택' 카드뉴스]

서울특별시, '강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주택정책과. 2022.09.14.



서울특별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강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대책]

분야	주요 내용																
강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올해 9월 정부 설치 예정)'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2023년부터 강통전세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응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 시 정부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 안내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서울시 운영중)'은 강통전세 등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차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 예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개선</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계약 종료 (이사를 원할 때)</td> <td>대출금 상환 불가 서울시 이차지원 중단</td> <td>대출금 상환연장(최장 2년) 서울시 이차지원 지속</td> <td rowspan="2">보증 관련 업무 협약 개정 필요</td> </tr> <tr> <td>이사불가, 신용불량 등 임차인 피해 발생</td> <td>이사가능, 신용양호 등 임차인 피해 없음</td> </tr> <tr> <td rowspan="2">계약 연장 (연장조건 미충족)</td> <td>대출금 상환 불가 서울시 이차지원 중단</td> <td>대출금 상환연장(최장 2년) 서울시 이차지원 지속</td> <td rowspan="2">연장 관련 업무 협약 개정 필요</td> </tr> <tr> <td>주거지 불안정 등 임차인 피해 발생</td> <td>주거지 불안정 등 임차인 피해 없음</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개선	비고	계약 종료 (이사를 원할 때)	대출금 상환 불가 서울시 이차지원 중단	대출금 상환연장(최장 2년) 서울시 이차지원 지속	보증 관련 업무 협약 개정 필요	이사불가, 신용불량 등 임차인 피해 발생	이사가능, 신용양호 등 임차인 피해 없음	계약 연장 (연장조건 미충족)	대출금 상환 불가 서울시 이차지원 중단	대출금 상환연장(최장 2년) 서울시 이차지원 지속	연장 관련 업무 협약 개정 필요	주거지 불안정 등 임차인 피해 발생	주거지 불안정 등 임차인 피해 없음
구분	기존	개선	비고														
계약 종료 (이사를 원할 때)	대출금 상환 불가 서울시 이차지원 중단	대출금 상환연장(최장 2년) 서울시 이차지원 지속	보증 관련 업무 협약 개정 필요														
	이사불가, 신용불량 등 임차인 피해 발생	이사가능, 신용양호 등 임차인 피해 없음															
계약 연장 (연장조건 미충족)	대출금 상환 불가 서울시 이차지원 중단	대출금 상환연장(최장 2년) 서울시 이차지원 지속	연장 관련 업무 협약 개정 필요														
	주거지 불안정 등 임차인 피해 발생	주거지 불안정 등 임차인 피해 없음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상담하고 서식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 매뉴얼 게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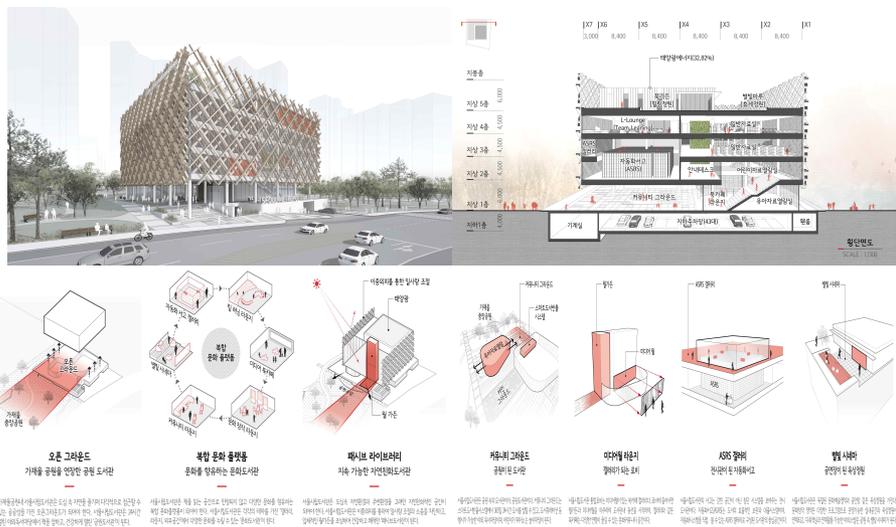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새 시립도서관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도시공간기획담당관. 2022.09.29.

건축 정책
환경
문화 관광

서울특별시가 두 번째로 건립하는 시립도서관인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은 '공원 속 도서관'으로 조성된다. 지상층은 필로티 구조의 개방된 형태로 만들어 공원과 도서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 건물 외벽에는 자연친화적인 목재 이중외피를 적용해 일사량을 조절하고 소음을 차단한다.

당선작에 따르면 건물 외부에 이중외피를 적용해 일사량과 소음을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물로 조성된다. 자동화 서고(ASRS)를 구현하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도서관이 곧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로비에는 미디어 전시벽과 책카페가 어우러진 안락한 열린공간, 옥상에는 '별빛 시네마'를 콘셉트로 한 정원을 조성한다.

심사위원회는 “도서관이 지어지는 대지의 향과 땅의 모양, 그리고 주변상황을 잘 해석해 설계한 수작이다. 평면의 밀도와 설계가 매우 뛰어나고 도서관의 기능을 잘 해석해 실행과정에서 큰 변화없이 구현할 수 있는 합리성과 현실성, 그리고 외관의 독특함은 지역 공공 도서관으로서 상징성을 갖춘 설계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이미지]

부산광역시,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

건강정책과. 2022.09.29.



부산광역시는 도시기온 상승 등 도시환경의 취약성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열섬 완화정책’으로 제7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동정책분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란 단지 신체적 건강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전반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부산광역시는 2007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해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은 그동안 도시기온 상승 등 도시환경의 취약성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펼쳐 온 ‘도시열섬 완화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도시열섬 모니터링을 통해 기온을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 실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또,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냉방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는 등 근거 중심의 효과적 실천방안도 추진해 왔다.

특히, 부산광역시가 시민참여 시책으로 ‘그린아파트 인증제’, ‘저탄소 마을’을 운영한 점과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학교에 방문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진단하고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대기 전력 차단, 개별멀티탭 사용, 절수기 설치 등)을 제시해주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을 통한 시민 실천력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

주거재생과. 2022.09.06.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인 균형발전 이행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지원해 시민이 행복할 마을을 만드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인천광역시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를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모집한다. 23년 사업대상지는 10개소를 선정하며 3년간 최종 30개소의 구역이 선정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3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집수리 비용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이며,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대상지 경계를 설정하여 제안서를 공모기간 내에 군·구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지 경계는 가로(도로)로 해야 하며 면적은 1만~1.5만㎡ 이내로 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10. 31.(월)까지
 * 읍면동사무소 및 지내방 사립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 고지·공고에서 확인

구역별위 10,000㎡~15,000㎡(10% 범위 조정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정령 발표1 입안대상지역 요건 해당구역
 -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시 면 비 1개소 당 30억 원 이내
 사업내용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주택개량 등 마을가꾸기

신청자격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제출처 해당 군·구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광화군	도시개발과	930-3849	연수구	도시주택과	749-8615
울진군	도시주거개선과	899-3921-3	남동구	도시재생과	453-2803-6
중구	도시관리과	760-7653	부평구	도시개발과	509-6922-3
동구	도시정비과	770-6692-4	계양구	건축과	450-6795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880-7333	서구	도시재생과	560-30125

인천광역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포스터]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2024년 개장 목표로 본격 조성 착수

DMZ정책과. 2022.09.07.



경기도가 민통선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경기도가 국방부와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최종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총 11만8,000여㎡ 부지를 완전히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10월부터 상수 공급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 도로 재포장 등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 카페, 화장실 등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울타리, CCTV, 가로등 등의 안전시설 보강과 환경정비 등의 작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와 인근 임진각 평화공연, 생태탐방로, 도라산 평화공원 등을 연계, DMZ 평화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공식 개장하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경기도형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소멸 위기 어촌 위한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 2022.09.07.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이 고령화와 줄어든 어업활동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경기도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수산물진흥원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월곶, 오이도, 두서, 상동, 흘곶 등 5개 어촌계를 7월 1일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별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월곶포구추계 신규콘텐츠 발굴, 월곶항내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내용으로 한 국가어항 선진마을 견학을 통한 월곶포구축제 개최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 증진,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담은 건강한 오이도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마을 견학 및 친환경 캠페인 개최 ▲유어장 안전시설 관리와 홍보시스템 완비를 목적으로 하는 두서어촌 공동체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역사 자료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동 어촌계 다시 희망을 펼치다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문화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흘곶어촌마을 미래 해양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은 지난 8월 24일 흘곶어촌계를 시작으로 8월 31일 월곶어촌계와 각 어촌공동체 특성에 맞는 주제를 바탕으로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은 공동체가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과 관리를 지원하고 공동체간 성과발표를 통해 우수 공동체도 선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2023년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지원사업' 공모 추진

주택건축과. 2022.09.13.

건축
정책

환경

전라북도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는 '2023년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매년 시군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9개 시군 18개소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남원시, 김제시 2개 시군을 선정, 총 6억 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원시(죽향동 요천로 간판개선사업)는 광한루 요천로 주변의 낡고 커다란 간판 126개를 정비하고, 새 간판 67개로 교체, 김제시(만경로 예쁜간판꾸미기 사업)는 만경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후간판 117개를 정비하여, 새 간판 65개로 교체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2023년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시군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 주민참여도, 지역적정성 등을 고려해 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군에는 도비 1억 8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해, 간판디자인 설계, 간판 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내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정비시범구역 지정, 간판 디자인경유제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전국 유일 '행복동지사업' 호응

건축개발과. 2022.09.05.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안전

전라남도는 노후 주택 보수가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행복동지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동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바닥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과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행복동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현재까지 총 872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다.

사업비는 2018년까지 순수 지방비로 충당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돼 2019년부터는 매년 복권기금 20억여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26억 원과 시군비 8억 원 등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약 17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전남건축사회 등 전문가 협조를 얻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개보수를 하는 만큼 혜택을 받은 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건설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올라 낡은 집을 고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행복동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전국 최초 임대형수직농장 및 노지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과, 2022.09.12.



경상북도는 청년과 스마트팜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상주에 조성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청년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스마트팜 기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가 42.7ha의 전국 최대 규모로 자리하고 있다.

청년보육센터는 매년 52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20개월에 걸쳐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은 선발과정을 거쳐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온실 스마트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수 등 노지 생산 지역에도 스마트팜을 적용하기 위해 사과를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미래 농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수직농장이다. 수직농장은 완전밀폐된 공간에서 외부환경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매일 일정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 농업 모형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수직농장을 보급·육성해 농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임대형 수직농장 3,300㎡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조성 조감도]

[스마트팜 설비]

경상북도,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 공모사업'에 올진 구산항, 영덕 오보항 선정

해양레저관광과. 2022.09.19.



경상북도는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 공모사업'에 연안 4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올진 구산항, 영덕 오보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마리아·요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장 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진 구산항은 인근 구산해수욕장, 월송정, 해양치유센터 개발 등 해양관광 자원이 많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해양레포츠 기반 시설을 구축할 경우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해양레저인과 상생해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덕 오보항은 어선이 한척도 없는 유휴어항으로 해양레저항 개발이 용이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보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스노클링, 투명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 많은 해양레저인들을 유인할 수 있다,

특히, 인근 국립청소년해양센터의 청소년 해양레포츠 교육에도 오보항을 활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조용한 어촌마을이 해양레저 활동과 함께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활기찬 어촌으로 변모가 기대된다.



[올진 구산항 조감도]



[영덕군 오보항 해양레저항 개발 계획도]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행안부, 「공유누리」에서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지역디지털서비스과. 2022.09.0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9.9.~9.12.)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8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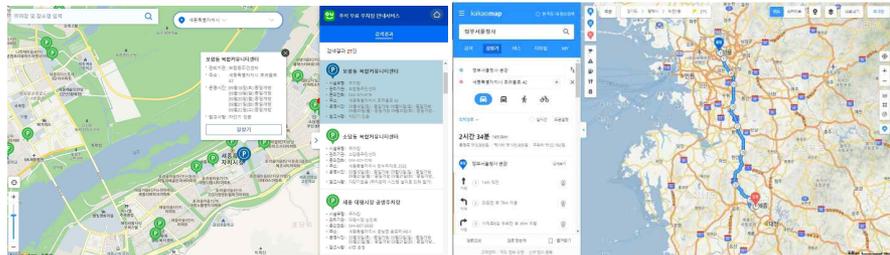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4,184개이다.

[권역별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수]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4,720	1,710	1,491	2,466	2,360	1,177	260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 「공유누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하여 '추석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 지도에 표시되고 무료주차장 개방 시간, 위치정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는 검색창이나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하여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누리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찾기 서비스]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 본격 추진

공공데이터정책과. 2022.09.14.

국도
정책

도시
정책

환경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리빙랩 프로젝트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과제 세부내용]

분야	과제명	세부내용	수행지역
교통 약자	휠체어로 대학로 안전 정복	대학로에서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시설(문화예술, 숙박, 음식점, 화장실 등) 데이터 구축	서울특별시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성 정보 수립 플랫폼	서울 2개 권역에서 휠체어 등 이동약자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시설 데이터 구축	서울특별시
환경 기상	춘천시민 참여형 기후대응 도시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공원 데이터 구축(토지이용, 수목 등) 및 도시공원 개선방향 제언	강원도 춘천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 트리맵으로 탄소중립 실천	가로수 현황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광주광역시
도로 안전	도로여건 지표화를 통한 교통 정온화 시설 효율적 입지선정	교통관련 민원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물 실사 등 데이터 수집 및 교통 정온화* 우선지역 제시 * 교통 정온화: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이용이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만들고,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부터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	경기도 포천시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9월 15일(목) 13시 오픈스퀘어-디(D)(서울 창업허브)에서 전문가 토론회(포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 관련 다자간(민·관·산·학·연) 소통 및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 토론회(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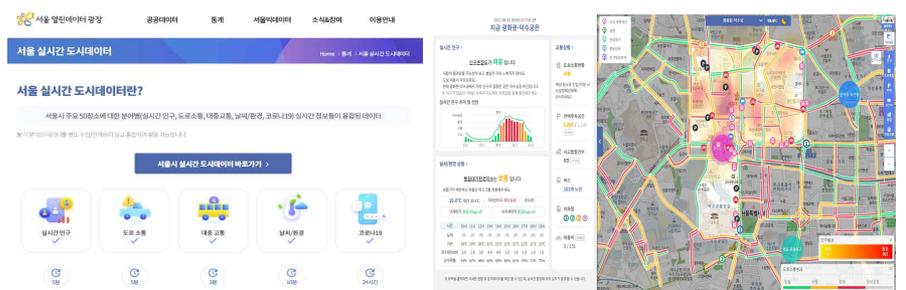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혼잡도·도로상황…주요 명소 50곳 ‘실시간 도시데이터’ 한눈에
 디지털정책관. 2022.09.01.



서울특별시가 관광지, 공원, 주요상권 등 서울의 주요 장소 50곳의 실시간 현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개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SeoulRtd/)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개발자 등 원하는 누구나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픈 API로 개방한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코로나19 방역, 관광안내, 공원관리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도 활용,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비짓서울(http://korean.visitseoul.net)’을 통해 주요 관광명소와 한강공원의 밀집 예상정보와 날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강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장 잔여 주차대수, 인구밀집정보, 주변 도로소통 상황, 일기예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안내페이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